

임정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권 상 원 / (산림기술사회 회장)

과거의 조림을 중심으로 하던 녹화임정을 산림의 이용을 증진하도록 하는 경영임정으로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은 1. 적극적인 산업정신 형성 2. 시대통찰력 가진 전문가 양성 3. 산림경영의 비효율성 제거방안 4. 산림경영모델(범위 경영) 확립 5.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조정 등 5가지 주요문제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

지난 4월에 개최된 산림 기본계획 심포지엄에서 산림작업 분야의 한 발표자에 의해 임정의 패러다임 전환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참석자 대부분이 패러다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임정의 패러다임 재정립과 목표설정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하바드대학의 MBA교수인 Stephen R. Covey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가지 습관” 이란 책을 중심으로 정리코자 한다.

패러다임은 그리스어의 패러디(Parody)라는 원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개념은 모델, 관념, 지각, 시각준거를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에 대한 견해나 해석방법 등

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의 낡은 전통, 낡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로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하므로써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고, 즉 혁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볼 수 있다. 보들레르는 “앨버트로스”라는 시에서 “긴 날개가 너의 보행을 방해한다는 표현으로 앤버트로스의 커다란 날개가 땅 위의 걸음걸이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바닷새 앤버트로스는 하늘을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땅 위에서 걸음을 걸을 때는 오히려 날개가 거추장스러워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임업이 조림과 사방을 내세워 녹화임정을 추진하면서 업역의 중심이 치우쳐져 균형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는 한국의 임업과 대조할 수도 있다. 그렇다! 수십년간 임업을 역동적으로 이끌었던 “녹화임업”이 개발국 시절의 임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해 정책목표를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70년대 이후 산림자원이 유일한 재생자원이라는 산림자원 경영의 모토(motto)로 내걸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림과 사방사업 중심인 녹화임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녹화사업을 국가의 임정목표로 하는 산림정책 패러다임은 국가 경영전략상 성공한 경우로 우리 임업사를 장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성장, 고임금, 고물가, 만성적 스태그인플레 등의 가파른 경제체제에 익숙해진 대부분의 산림경영자들이 적정한 자기 자본투자와 국가보조 등을 적정범위의 사업투자로 연결하는데 실패하므로써 생존을 위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창출하거나 기술의 R&D를 도모하지 못한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1차 농림산업은 사업성에서 가능성이 없다는 막연한 감성적 이론으로 임업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하여 산업기반을 비틀거리게 하고 말았다. 더욱이 최근 환경생태적 이념을 앞세운 일부 생물론자들이 산림에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도록 보전해야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산림작업

의 핵심인 무육·벌채, 산림시설인 임도작업까지도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임업경영의 입지를 약화시킨 것은 산림환경의 메카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패러다임은 임업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 대부분의 의식구조가 전통적인 관료조직에 물들여져 관료화 되어 산림 정책 결정이나 산림 경영관리 조직 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조직은 물론 사업실행을 맡고 있는 관계분야의 모든 곳에서 관료적인 조직형태의 틀로 굳어버려 직능중심제에서 발현할 수 있는 독창성 즉, 창의성 개발이나 전문적인 경영노하우 창출이 일어나지 못하고 관리자적 위상정립과 현상유지에 급급하여 외부적인 탄력을 상실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임업기술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보다 전 임업조직원을 고급관리자로 발돋음 하도록 뛰게 만들므로 직업인플레를 유발시켜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직업전문화를 도모하지 못한채 관련조직이 경직되어 버린 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패러다임은 모든 산림사업을 사업실행자의 업적이나 성공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가치설정의 표준틀을 만들므로 산림경영체의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을 잊어 버린 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 사회의 성공잣대가 외형적 성장이나 경제규모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지만, 국토의 65%나 되는 산림이 건전한 삶의 대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다른 여타산업과 비교하면서 표준화하여 외형적인 규모의 성장으로 판

단한 점과 임업 관련기관에서 소속기관이나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시대적 이슈로 연결하지 못하고 계선형태의 조직에만 열중하게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패러다임은 산림을 소유하려는 목적과 의지가 불분명한 부분에 있다. 국민 대부분이 임업경영 보다는 타 목적으로 산림을 소유하려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잔존해 있어 산림을 임업경영 이외의 투자수단으로 보유하려는 마인드가 형성되어, 만성적인 인플레 등에 의한 임지가격 상승은 임업투자를 꿈꾸는 임업경영인들에게는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점이라 할수 있다. 산림경영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지도 못한 기업가들이 필요치도 않은 산림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실물자산으로 보유 한다던지,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선조의 묘지확보라는 미명으로 산림을 소유하려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임업경영의 정상화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 패러다임은 국가보조와 저리융자를 통한 차입의존으로 정확한 목재생산규모와 임업소득을 분석하지도 않고 산업적 자기자본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정부보조금만으로 생산활동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차입경영으로 임업경영인들이 경영구조를 불실화 한 것은 더욱더 임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녹화임정의 패러다임들이 지난 수십년간 우리 임업발전의 딜레마적 수레바퀴로 누적되어 왔지만, 정치, 경제환경이 바뀌어진 '90년대 이후 우리 임

업의 현주소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면적을 중시하는 규모의 임업에서 임산물의 품질과 범위를 중시하여 실행하는 임업경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법률,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즉, 각 경제 단위별로 연계효과와 사회변화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산림보전과 개발을 추구하는 경영체제를 확보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 실행을 담당할 경영범위를 찾도록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넌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독립적인 경영단위 조직인 건전 독립가나 협업경영체를 정책적으로 육성해 산림경영의 저변을 확장한 후 이들로 하여금 투자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전략적 산업형태를 만들어 감으로써, 이들이 범위경제의 요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 틀을 만드는 패러다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신속성과 신축성을 키울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패러다임은 산림전문가 양성이다. 과거와 같이 기술이 접목되지 못한채,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양성된 일반 관리자들을 실무부서에서 활용하기 보다는 임업기술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통찰해 능동적으로 임업기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기술자들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관리자능력과 전문지식이 초급관리자의 전문성을 훨씬 웃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리자 지식이 아직 실무자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할 수 있다. 대부분 관리자가 실무시각 보다는 정치적 온정주의에 따라 정책적인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전 인력을 육성하고 키워 미래임업의 구심체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셋째 패러다임은 우리 임업의 전략적 제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global경영에 따른 산림소유의 집중과 비효율성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림에 대한 기본법인 산림법에 산림경영권을 소유로부터 분리시켜 보장하므로써, 자본주의의 핵심인 경제적 주권을 분리시켜야 한다. 더욱기, 이들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산림을 소유하거나 분수림체계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체계를 세워 범위경영의 범주를 확장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제의 재확립, 금융 융자제도의 개선과 규모임업을 범위임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치, 사회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패러다임은 적정한 수익성과 자본의 적정화를 통한 생산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외형상 규모가 큰 산림소유자를 독립기의 요건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임업 생산소득을 범위경영 단위로 개발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자본의 적정비율을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자본적 환류를 통한 경

영모델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IMF경제도 궁극적으로는 수익성 결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린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환경을 참고하여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1차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선진국형 경제 체제하에서 농림생산업이 년간 4-5%의 낮은 임목성장을 만을 유지하드래도 전전한 선도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은 환경개선에 나머지 이익잉여를 보탤 수 있으므로 국가 경제적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공해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여타산업들 보다 궁극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국가 경영철학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 임업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리고 장기투자에 따른 투자위험을 최소화 시킨다면 개발국 수준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큰 메리트를 얻지 못하였지만 금후 예상되는 선진국형의 환경친화적 미래산업으로 기꾸려는 정부의 정책의지 여하에 따라 타분야의 여타산업들에 뜻지않은 녹색산업으로 각광받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환경 문제가 '92리우환경회의 이후 개발을 우선으로 하든 고전적 경제 논리에 쇄기를 박으면서 일용 산림이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의 주무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잘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경영인식을 확산시켜 궁극적인 임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미래임업은 녹화임정에서 경영임정으로 순리적인 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